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징 계 요 구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 주의사항 미준수 등 품위 훼손
소 관 실 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국
관 계 기 관	◇정책과
징계 대상 자	◇정책과 행정사무관 A
징 계 사 유	

◇정책과 행정사무관 A는 2021. 4. 13. 전 근무기관¹⁾인 ●●미술관(△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 사실 및 자택 귀가 등을 ●●미술관 직원으로부터 안내²⁾를 받아 당시 부서장(B)에게 보고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고 자택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전 11:15경 세종특별자치시 ■■■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즉시 자택으로 귀가하였다.³⁾

위 사람은 선별검사를 받은 후 선별진료소로부터 「선별검사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⁴⁾」 전달받았으며, 해당 안내문에는 코로나19 검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외출 및 타인 접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1) A는 '20. 4. 13.~'21. 4. 11. ●●미술관(△파)에서 근무, '21. 4. 12.자로 ◇정책과 인사발령

2) ●●미술관 담당자로부터 4.13.(화) 오전 9:48 "C 주무관님이 오늘 아침 확진 판정을 받아서, 빨리 파에 말씀하시고 일단 덕에 들어가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오전 10:30경에 확인하였음

3) 서울특별시 송송보건소의 ●●미술관 확진직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21. 4. 13. 14:30경 위 사람은 능동감시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실을 미술관 △파에서 21:25 문자로 통보받았음

4) 「선별검사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주요 내용 ('21. 5. 12., 검사실에서 세종시보건소에 요청하여 매일로 받음)
-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반드시 격리상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후 다른 장소 방문이 불가하니, 즉시 자택으로 귀가해 주세요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외출 및 타인 접촉을 금지**하여 주세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운영지원과에서는 2020. 3. 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통보하고, '검사 직후부터 반드시 자택격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고, 2020. 12.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위 지침에 따르면 방문서비스를 사례로 이용자(고객)의 입장에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방문근로자의 방문 일정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선별검사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여 다른 사람과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당초 예약된 인터넷 설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1. 4. 13. 11:30~12:00경 인터넷 설치기사⁵⁾(이하 “설치기사”라 한다)로부터 자택 근처인테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락을 받은 후 설치기사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자택을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1. 4. 13.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이하 “세종시보건소”라 한다)는 위 사람에게 전화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치기사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2021. 4. 13.~4. 27.(15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하였으며, 2021. 4. 20. 세종시보건소는 위 사람의 행위에 대해 문체부에 문서로 통보⁶⁾하였다.

5) '21. 4. 12. 자택 인터넷 설치요청을 위해 통신사에 예약하여, 4. 13. 12:00경 설치기사가 자택에 방문하기로 함

6) 「코로나19 선별검사 후 격리권고 미이행 사례 통보 ('21.4.20.)」
○ 세종★번 (A)
- 소속 : 문화체육관광부
- 4.13일 10:30분, 지인확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 선별진료소)
- 귀가 후, 11:30~11:50분 동안 자택에 외부인(인터넷 설치기사) 방문 확인

그 결과 설치기사의 생업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공직사회가 비난⁷⁾받게 하였고 방역지침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신뢰를 훼손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위와 같이 공직자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타인과 접촉하여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위 사람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경정계) 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한 외부인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됨.

7) 2021. 4. 16. '인터넷기사로 하루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고 2주간 일을 못하게 되어 생활에 타격이 크며, 공무원이 아니라 이에 타당한 징계 조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사실도 안 알려 인터넷 설치 공무원 물의' 등의 제목으로 10여 차례 보도됨에 따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 발생